

# 정부, 일제 강제동원 굴욕적 해법 강행하나

### 12일 공개토론회...3자 변제 '병존식 채무인수' 최종안 유력 시민단체, 토론회 앞서 비상시국선언...참여 단체·개인 모집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의 공개토론회가 오는 12일 예정되면서 이번 주가 일제 강제동원 해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실상 이번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강제동원 문제가 한일 간 최대 갈등 현안으로 떠오른 지 4년여 만에 정부의 최종안이 제시되고 강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병존식 채무인수' 방안의 해법을 고수하고 있어 이후로도 피해자들의 반발과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국회 공개 토론회'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국회 계단에서 비상시국선언을 한다.

시민모임은 이를 위해 비상시국선언에 뜻을 같이 할 단체 및 개인을 오는 11일 오후 1시까지 모집하

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들과 같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비상시국선언 참가단체 및 참가자 일동' 명의로 "피해자 인권, 존엄 무시한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 철회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시민모임은 12일 열리는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다.

외교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 그리고 지난 7~9월 정부 주도로 열렸던 민관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에게 토론자로 참석해 줄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이 주최하고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직이 그동안 진행한 한일 양국의 교섭 내용을 설명하고, 심규선 일제 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시민모임측은 이번 공개토론회를 두고 정부가 마련한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이자 피해자들과 논의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걸

치레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참석해 정부의 기존 입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인 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병존식 채무인수' 방안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병존식 채무인수는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존재하되 제3자가 그와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시민모임과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배상 책임 선상에서 완전히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를 보장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강제동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측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배상금 지급 주체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업무 수행을 위해 최근 정관 개정을 신청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승인은 이르

면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단순 요식행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시민모임측은 공개토론회에 앞서 비상시국선언을 하고 정부의 해법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시민모임은 비상시국선언을 통해 "2018년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쟁취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가해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채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만으로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해법안은 명백한 졸속 합의이자 굴욕이며 외교참사다"면서 "역사왜곡 합의이자 법주권 포기·대법판결 무력화 합의인 정부의 해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정부 해법안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고, 일본의 압력에 굴복해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정부가 이 해법안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2015 한일합의'와 같은 외교 참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시민들의 거센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

## 참새 1위...2위는?

### 광주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새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도 발견

겨울철 광주 지역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새는 참새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26일까지 광주 도심 철새와 텃새를 조사한 '광주 도심지역의 조류 동시 센서스'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총 65종, 3067마리의 새가 확인됐다.

종별로는 참새가 300마리로 가장 많았고, 붉은머리오목눈이(275마리), 물닭(203마리), 까치(179마리), 직박구리(178마리), 민물가마우지(151마리) 순으로 확인됐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인 큰기러기(156마리), 큰고니(21마리), 뿔종다리(10마리), 흰목물떼새(6마리) 등도 관찰됐다.

종 다양도 지수는 3.3317로, '양호' 수준에 들었다. 지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종이 서식한다는 뜻으로, 광주는 특별한 생태계 교란 없이 충분히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희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신나는 눈썰매 8일 광주 패밀리랜드 눈썰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눈썰매를 타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전남 10가구 중 4가구 반려동물 키운다

### 전국 평균 상회...복지 인식은 낮아

광주·전남의 10가구 중 4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어웨어가 최근 발표한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광주는 36.4%, 전남은 40%에 달해 전국 평균(36.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세~69세 전국 성인 남녀 2000명(광주·전남 지역민 120명 포함)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현황, 개 식용과 동물학대 등 동물복지 문제 및 관련 제도 등을 물었다.

단체는 광주·전남의 경우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율이 높는데 반해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은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에서 반려견을 키운다는 응답자 중 18.2%가 반려견을 기르는 장소로 '실외에서 묶어놓고 기르

고 있다'고 답해 세종시, 경북,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다는 점에서도. 전남은 16.7%로 5번째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1년간 개고기를 식용으로 먹은 적 있다고 답한 광주와 전남 지역민은 각각 5.5%와 4.6%에 달했다. 주로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와 '외식, 모임 등 사회적 관계유지를 위해서'를 이유로 꼽았다. 반대로 먹지 않은 이유로는 '개에 대한 친밀감 등 정서적인 이유'가 가장 많았다.

반려견 동물등록 여부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응답자 중 등록을 했다는 응답자는 광주 63.6%, 전남 66.7%로 전국 평균 70.7%에 미치지 못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

## 공정한 교육 혜택·AI로 미래인재 양성 광주시교육청 공약 사업 9815억 투자

### 다양성 2338억·책임교육 237억 등 5대 영역 66개 사업 계획 확정

광주시교육청이 직선 4기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모두 9815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한다.

시교육청은 "5대 영역 66개 공약사업과 101개 세부과제를 담은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다양성을 담아 모든 아이의 진정한 실력 향상,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받지 않는 공정한 교육적 혜택 제공, AI(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5대 영역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66개 공약사업에 4년간 총 98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5개 영역별 예산으로는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다양성교육' 13개 공약사업에 총 2338억원(23.82%), 삶의 힘을 키우는 '책임교육' 13개 공약사업에 총 237억원(2.42%), 희망사다리라는 '공정교육' 11개 공약사업에 총 1882억원(19.18%)을 배정했다. '공정교육'은 '교육은 희망사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 교육감의 철학이 녹아있다.

또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교육' 15개 공약사업에 총 4535억원(46.2%), 다함께 주인되는 '상생교육' 14개 공약사업에 총 822억원(8.38%)을 투자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선거공보물, 광주시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혁신적 포용교육 추진단과 관련 부서 검토, 경청간담회 등을 거쳐 공약실천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성별·연령별·지역별 무작위(전화 ARS)로 선발한 50명의 공약평가시민배심원단을 구성, 공약실천계획 초안을 심의해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다.

자세한 검토 결과는 시교육청 누리집 '소통의 교육감실-공약과 매니페스토'에서 2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다양한 실력이 미래가 되는 광주교육을 이룩하기 위해 새 비전을 공약에 담았으며 시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실천계획 로드맵에 따라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달라진 광주교육의 미래를 체감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진행 상황을 점검해 매니페스토를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2023년  
3.22 ~ 4.19  
묘이장 윤달  
미리 준비하세요.  
사전예약 필수!**

- 윤달 이장 하실 분
- 별초, 묘지관리가 힘드신 분
- 선산을 한 곳으로 조성하고 싶으신 분
- 조상을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으신 분
- 자연장을 선호하시는 분

**광주 전남  
수목장 / 매장 / 봉안  
이장전문업체**

**묘이장/화장/평장/납골/자연장  
정원장묘**

☎️ 상담문의  
**062-412-6183**  
장묘 관련 모든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